"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존치 필요하다"

전주시의회 김은영 의원 5분 발언… "도교육청 지정기준 전국 평균치보다 높아 자사고 지정 이후 지역과 함께 성장해 효자동의 자랑이자 전주의 아이콘이 돼"

최근 전북교육청은 5년마다 이루어지는 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80점 미만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해 전주 상산고등학교 자사고 폐지와 관련, 지역주민의 들끓는 여론으로 소란스럽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은영 의원은 전주시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전주상산고 자사고 존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는 서울은 70점 이외 지역은 60점이었으나 전북은 70점이었고 올해는 80점으로 상향돼 유달리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기준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부산 대구 등 9개 시도 교육청은 재지정 기준이 70점인데 상산고의 주장대로 타시도의 평가기준 등과 비추어 편파적으로 높다.

김 의원은 "상산고의 존폐는 상산고와 전북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효자동 지역주민을 비롯한 전주시민의 삶과 의식에서 상산고를 빼고 말할 수 없다"며, "전주상산고는 효자동 일대가 본격 개발되기 전 1981년에 설립된 고등학교로 전국 많은 사학들이 재단의 비리와 부정으로 갈등에 휩싸이고 있을 때 상산고 재단은 말없이 학교에 투자하고 인재를 키워 자사고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상산고는 자사고 지정이후 이사장이 사재 451억을 출연, 기숙사 신축비용 190억을 별도로 지원했으며 지역과 함께 성장해 이제는 효자동 지역의 자랑이자 전주가 내세울 수 있는 아이콘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교육도시 전주는 과거 전주고가 명성을 떨칠 때 통했으나 이제는 상산고가 교육도시 전주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전국의 많은 학생들이 상산고에 진학하기 위해 전주를 찾아 상산고로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가 연 200억 정도에 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상산고는 2001년 김대중 정부에 의해 7차 교육과정의 모순 극복을 위한 고교 교육과정 다양성을 명분으로 자립형사립학교로 지정되었으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며, 전주상산고 존치를 위한 전주시민의 지지를 부탁했다. /송효철 기자

민주당, 전주 특례시 지정 의지 '재확인'

전북 예산정책협의회서 약속

김두관 의원 "광역시 없는 전북·충북은 고려중 당정에서 깊이 심의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정부위원회 김두관 위원장이 전주 특례시 지정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청 협의를 통해 현재 인구 100만 이상으로 제한된 특례시를 전주시의 요구대로 지역 특수성과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전주 특례시 지정 의지를 거듭 피력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20일 전북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광역이 없는 전북과 충북은 고려중이며 전주 특례시는 당정에서 깊이 심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전주 특례시 지정에 대한 검토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전주시가 요구해온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인구 50만 이상 중추도시의 특례시 지정에 힘이 실리게 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 발전을 이끌고 전북도와 14개 시·군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전주 특례시 지정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지역 정치권 등의 힘을 하나로 모아 정부와 국회 등을 꾸준히 설득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실전과 같이… 전주시, 민방공 대피훈련

전주시는 20일 제410차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훈련을 전주시 일원에서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대형 화재 사고 대비 국민행동요령 교육 등 주민 대피훈련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주민 대피는 20분간 이루어졌다. /송효철 기자

청년주거복지정책 완성도 'UP'

전주시, 청년 주거정책 활성화 집담회 개최

임대주책 공급 시 수요·네트워크 구축 등 논의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과 전주형 사회주택 등 청년들을 위한 주거정책을 펼쳐온 전주시가 청년주거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주거복지 전문가, 청년들과 머리를 맞댔다.

전주시는 지난 19일 오후 7시 북카페 카프카에서 전주시의회 서난이 의원, 이한솔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주거복지 전문가, 전주시 사회주택 입주 청년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청년 주거정책 활성화를 위한 집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집담회는 지난 2017년부터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과 전주형 사회주택 등 청년 주거정책을 추진해온 전주시가 청년매입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창업지원주택, 주택매입보증제, 주택바우처 사업 등 청년주거복지정책을 확대하기 위한 전문가와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시는 청년주거복지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그간 전문가 초청 간담회과 청년 인터뷰 등을 진행해왔다.

권대환 사단법인 전북주거복지센터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집담회는 주제발표와 발언, 청중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주제발표 시간에는 전주시의 '청년 주거정책 계획 및 과제'에 대한 발표에 이어, 이한솔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이사장과 전주형 사회주택 거주 청년들의 발표 등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이한솔 이사장은 '청년 주거공동체 사례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청년 당사자의 다양한 현장 의견 수렴과 청년들이 경험하고 생각하는 주거정책의 개선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전주형 청년주거정책의 당사자인 김창하 청년과 윤지혜 청년이 각각 '전주달팽이집 운영사례 및 향후 계획'과 '주거공동체 일상과 당사자가 겪는 주거문제'을 주제로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과 전주형 사회주택에서 생활하면서 겪었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 생생하게 전달했다.

서난이 전주시의원도 전주시의 청년 주거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에 대한 발표를 통해 "청년 주거정책 추진시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 실효적인 주거정책, 소외됨 없는 청년 정책이 되도록 청년 당사자가 참여하는 네트워크 및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진 청중과의 대화 시간에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시 수요 및 요구사항, 참여방법, 사후관리 등 각 사업별 효과성 제고를 위한 실천적 방안 △청년 주거권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주거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주체 육성 필요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임채준 전주시 주거복지과장은 "주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안전과 밀접한 문제"라며 "정부지원 주거급여 및 주택구입 금융지원에서 소외된 청년 주거 정책에 만29세 비혼 1인 가구를 포함하는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지난해 세외수입 2636억원 징수

전주시는 2018년도 세외수입을 결산한 결과 당초 목표였던 2385억원보다 251억원 많은 2,636억원을 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일반회계 936억원 △공기업(상하수도)특별회계 1,501억원 △교통사업·의료보호 등의 기타특별회계 199억원을 각각 징수했다. 이는 2017년과 비교해 251억원을 더 거둬들인 것으로, 징수율은 5.9% 증가한 반면 체납액은 112억원이 줄었다.

특히, 시는 세외수입 징수멘토링(체납닥터)을 통해 부서 간 협업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하게 혼재된 세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고질 체납액을 줄이기도 했다. /송효철 기자

전북경찰청, 화재 대피 훈련 실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 실습도

전북경찰이 민방위의 날을 맞아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2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대구 사우나 화재 사건 등에 따른 대응태세 점검과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기위한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경찰의 숙련되고 적극적인 대응체제 확립과 훈련 숙달의 중요성을 교육했다.

또한 훈련 종료 후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실습도 이뤄졌다.

강인철 전북청장은 "위기상황 직면 시 부상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심폐소생술"이라며 "직원들이 경찰관으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훈련과 교육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찾아가는 음성언어치료서비스' 본격화

전북대병원, 난독 등 학습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언어치료사가 직접 언어치료·청능재활 등 치료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저소득층 및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양질의 언어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음성언어치료서비스-더드림(THE DREAM)'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북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이비인후과와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참여해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음성언어치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1년 동안 진행된다.

사업대상은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 중 언어·청각·학습장애를 동반하고 있는 학령기 혹은 학력전기 아동 및 청소년과 난독증을 동반한 학습장애를 겪고 있는 초·중등 학생이 대상이다.

사업은 병원이나 재활센터로의 접근성이 취약한 학생들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해 언어치료사가 직접 교육기관이나 지역아동센터 등을 방문해 △언어치료 △청능재활 △학습장애를 치료 등을 골자로 진행한다. 난독증을 동반한 학습장애 초중등생을 대상으로는 해당학교를 직접 방문해 언어중재서비스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북대병원은 특히 난독증 학생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근 전북도교육청과 난독학생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남천 병원장과 김승환 교육감 등 양 기관의 대표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전북지역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 및 언어발달을 위해 교육과 치료지원 업무에 공동으로 협력키고 했다.

협약에 따라 병원에서는 난독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전문가를 파견해 체계적인 진단과 치료, 부모교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으며, 도교육청에는 이번 음성언어 발달 교육 및 치료서비스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조남천 병원장은 "음성언어치료서비스 사업이 지역 학생들의 학습능력과 언어발달 증진에 기여하길 바라며, 이번 사업 외에도 취약계층의 의료지원을 강화하는 공공의료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의료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전주시는 중장기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4억원을 투입해 '2019년 노후 경유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유차에서 나오는 매연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올해는 국비 2억원 등 총 4억원이 투입돼 총 80대의 노후 통학차량 교체를 지원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전주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차량 소유자로 2010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5인 이상 15인 이하 승합차량)을 폐차(수출말소포함)하면서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5일간으로, 시는 1대당 차량 구매비의 일부인 500만원을 정액 지원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풍수해보험 가입비 지원

전주시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자체에서 가입대상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시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보험가입은 5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직접 가입이 가능하며, 시·구청,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도 상담과 가입이 가능하다.

시는 저소득층 경우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하는 등 재해발생시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송효철 기자

'경적 소리 항의' 목검으로 살해

법원, 40대 가해자 항소심 실형

차량 경적 소리가 시끄럽다며 항의하던 시민을 목검으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전 0시 50분경 김제시 검산동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B모(41)씨의 머리와 다리 등을 목검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편의점 파라솔 아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인근에서 A씨가 차량 경적을 울리자 시끄럽다며 항의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넘어뜨린 뒤, 차량 트렁크에서 목검을 꺼내 머리와 다리 등을 폭행했다. 또한, 그는 B씨의 일행 중 한명을 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일단락됐지만, B씨는 당일 오후 8시 14분경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결과 사망원인은 '외부충격에 의한 뇌출혈'로 조사됐다. 경찰은 목검에 의한 폭행이 결정적인 사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6년을 선고하자 A씨는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강석훈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